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형제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밑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2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 되겠군.
-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 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때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을,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는 불법행위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 이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를 법적 정의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 이를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배분적 정의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 ㉠ 이는 과실상계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불법행위가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공동불법행위라고 규정한다. 공동불법행위가 가해자들의 고의 없이 과실만에 의해 발생했고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를 가해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본인 외의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원래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 갑이 가해자 을과 병의 공동불법행위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을 때 갑, 을, 병의 과실이 각각 10%, 30%, 60% 인정되면, 을과 병은 갑의 전체 손해액 중에서 10%만큼 감액된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때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의 비율을 기준으로 ㉢ 삼아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만약 병이 파산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을이 연대책임자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모두 배상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때도 있는데,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특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청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 배상 방식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 이 방식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이 거액이고,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가해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1의 과실 비율을 1:1, 피해자와 가해자 2의 과실 비율을 1:3이라고 판단해 가해자 1, 2 각각의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 (가)는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열거하고 각각에 적용된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 ㉢ (나)는 불법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고 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나)는 불법행위의 개념과 법률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법률적 이론을 분석하고 있다.
- ㉤ (가)와 (나)는 모두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그 규정이 적용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

17.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손해라고 한다.
- ②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법원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민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 ④ 공동불법행위 중에는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⑤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배상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8.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과 ㉡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을 ㉡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 ②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예상했다면 피해자와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을 ㉡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 ③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를 ㉠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 ④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가 단독일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를 ㉠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 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적을수록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과 ㉡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겠군.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 ② 과실상계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고려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④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 ⑤ 피해자의 과실에 적용된 과실상계가 피해자가 받을 전체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키기 때문이다.

20. <보기>는 (가), (나)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가), (나)를 읽은 학생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상의 상황]

○ 사건 당사자: A 법인, B 사, C 씨

○ 사건 내용

- A 법인은 부주의로 인해 오류가 있는 경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B 사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한 투자 상품을 C 씨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사는 투자 유의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C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여 1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C 씨는 자신의 손해가 A 법인과 B 사 때문임을 주장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A 법인과 B 사의 과실만에 의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C 씨의 과실도 인정함. 법원은 A 법인, B 사, C 씨의 과실 비율만 각각 30%, 60%, 10%로 판단하고 A 법인, B 사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은 지정해 주지 않음.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법인에 고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A 법인의 부주의는 C 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겠군.
- ② A 법인과 B 사의 과실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비율은, A 법인과 B 사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군.
- ③ A 법인의 과실이 B 사보다 작다고 판결한 것은, B 사가 파산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A 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겠군.
- ④ A 법인과 B 사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법원이 지정해 주지 않은 것은, C 씨가 입은 손해를 A 법인과 B 사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겠군.
- ⑤ C 씨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은, C 씨가 투자를 할 때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이겠군.

21.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는 그를 제자로 살을 것이다.
- ② 비단은 명주실을 살아서 만든다.
- ③ 나는 요즘 취미 살아 그림을 배우고 있다.
- ④ 그는 시골에서 자연을 벗 살아 살고 있다.
- ⑤ 그는 근면을 신조로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았다.

◆ 19년 4월 고3 21~25번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불법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을 찾고자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든다.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을 살펴보자. ㉠ 비책임원칙은 불법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달리 ㉡ 과실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때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비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원칙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법원이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 ㉢ 결국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 된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이 있다. 먼저 ㉣ 기여과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 우선 과실원칙이 적용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기여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이 원칙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비교과실은, 양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여과실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

21. 밑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비교과실의 한계
- ② 불법행위의 개념
- ③ 불법행위법의 기능
- ④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
- ⑤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이다.
- ② ㉡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③ ㉢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④ ㉠은 ㉡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은 ㉡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②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④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해서 불법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영화 속 장면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 달 후 변압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폭발하여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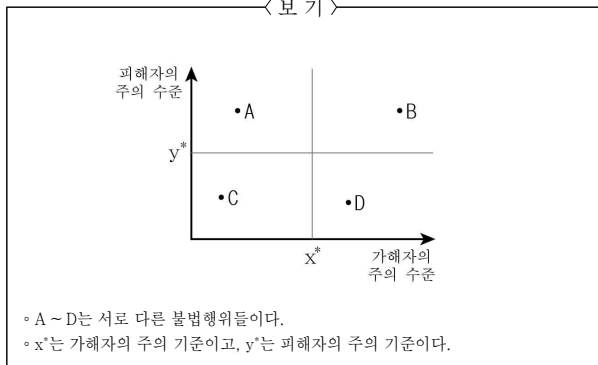
여기서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군.
- ②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③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겠군.
- ④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겠군.
- ⑤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① A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② B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켰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 ③ C의 경우 가해자도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④ A와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 출전: 오정일 외 공저. 《법경제학입문》

- 정답: 21.① 22.⑤ 23.④ 24.⑤ 25.⑤

◆ 16-9평 A형 22~26번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화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 조치

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밑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경쟁적이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 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바지하는 ② ㉡: 내리는
- ③ ㉢: 늘리더라도 ④ ㉣: 밀려난
- ⑤ ㉤: 세울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㉞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㉞ 제조물과 ㉞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은 공산품, 가공 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농수축산물 등 일차 농산품에 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해 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등이다. 그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

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22.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ㄴ.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ㄷ.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ㄹ.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물을 끓이던 도중 B사의 전기 주전자가 넘어져 쏟아진 물에 생후 8개월 된 A의 딸이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나) D가 E사의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하여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에어컨 통풍구에 분사하던 중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없었다. 조사 결과 탈취제의 LP가스가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 ① A가 B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겠군.
 ②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군.
 ③ B사는 제조상의 결함을 지닌 제품을 생산했군.
 ④ D는 승용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E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⑤ E사가 제조한 승용차 탈취제는 표시상의 결함을 지녔군.

24. ㉡와 <보기>의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① ㉡가 사후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해, ㉢는 결함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③ ㉡와 달리 ㉢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제도이다.
 ④ ㉢와 달리 ㉡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된다.
 ⑤ ㉡와 ㉢는 모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25.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장품, 건전지와 달리 고등어는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고 자동차는 ㉠에 포함되며, 이를 수입하는 자는 ㉢에 해당된다.
 ③ 복숭아 통조림은 ㉠에 포함되고, 이를 제조한 자와 복숭아를 생산한 자 모두 ㉢에 해당된다.
 ④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자동차 부품을 만든 자는 ㉢에 해당되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지만 제품을 공급했을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이라면 ㉢는 손해 배상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고 있다.

26.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② 밖으로 나와서야 날씨가 추운 것을 알았다.
 ③ 그녀는 차는 없었지만 운전을 할 줄 알았다.
 ④ 그 사람은 공부만 알지 세상 물정을 통 모른다.
 ⑤ 그녀는 그의 사랑 고백을 농담으로 알고 지나쳤다.

◆ 14년 11월 고1 23~25번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약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 A 씨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보호 장치를 잘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청약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신원 정보 확인이란 판매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확인도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인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금 결제 전 특정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의 컴퓨터 조작 실수나 주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에스스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에스스로란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맡겼다가 물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후 구매 승인을 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거래 안전장치로 결제 대금 예치제라고도 하며, 소비자는 에스스로 가입 여부를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에스스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기를 구입하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다. 현재 선불식 현금 거래에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스스로에 가입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며, 은행처럼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제품 배송 여부를 에스스로를 통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치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제품 구매 후 소비자 보호 장치로는 청약철회가 있다. 만약 A 씨가 악기를 배송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품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통상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A 씨처럼 단순 변심일 경우 반송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A 씨가 제품을 훼손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 및 철회에 관한 기록들은 5년 동안 보존되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소비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시간 경과나 사용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서적 등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 판매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청약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③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 ④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보다 보상에 초점을 둔다.
- ⑤ 온라인상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에스스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4. ㉠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승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 ④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25.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들에게 선물할 축구공을 주문했다. 이틀 후 축구공을 배송 받았는데 포장을 뜯어 본 아들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일에 그대로 반품을 요청했다.
- (나) 이 씨는 온라인 서점에서 학습 만화책을 주문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다음날 배송을 받고 무심결에 비닐 포장을 뜯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책을 다시 구매했음을 알게 되어 당일에 반품을 요청했다.

- ① (가): 김 씨의 청약철회 시점에는 문제가 없군.
- ② (가): 김 씨는 제품의 반송료를 자신이 부담해야겠군.
- ③ (가): 판매자는 김 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군.
- ④ (나): 판매자는 이 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군.
- ⑤ (나): 이 씨가 주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반품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겠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당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솥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